

# “국회 진입 계엄군, 본관 일부 전력 차단 사실 확인”

민주 국조특위, CCTV 영상 공개  
“해제결의안 5분뒤 지하 1층 단전”  
“국회 기능 마비작전 실제 드러나”  
“尹·김용현 지시 여부 등 철저 조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일부 전력을 차단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회 단전 시도 적발로 국회 기능 마비작전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단전 조치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폐쇄회로TV(CCTV)와 함께 제시한 당시 시간대별 주요 상황에 따르면, 작년 12월 4일 0시 32분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은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에 진입했다가 보좌관과 당직자 등의 저항에 막혔다.

계엄군 중 7명은 0시 54분께 국회 본관 4층으로 향해 배회하다 1시 1분께 승강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의원 등이 16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단전 조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고, 지하에서 국회 본관과 의회회관이 연결된 통로의 문을 소방호스로 묶어 통제하려 했다.

계엄군은 이어 1시 6분께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어 일반조명 차단기와 비상조명 차단기를 차례로 내려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국회 본관 지하 1층을 압축 전지로 만든 이 단전 조치는 약 5분 48초

간 지속됐다”며 “이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불과 5분여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계엄군이 본회의장이 있는 2층으로 먼저 시도했다가 막혀 배회하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갔던 것인데, 만약 계엄군이 2층 단전을 차단했다면 (비상계엄 해제) 본회의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영상을 보면 아찔하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당시 본회의장 안에 전기는 들어왔지만, 시스템 전원이 안 켜졌고, 밖에선 군경이 물려오고 있어 ‘거수로

하자’, ‘그래도 시스템 전원이 켜지길 기다리자’는 의견으로 육신각신하던 시점”이라며 “전기를 끊으면 (결의안 의결이) 불가능하다고 계엄군이 파악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사 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앞으로 예정된 특위 청문회에서 국회 단전이 사전에 계획됐는지, 특히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이 직접 지시했는지 등의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저항과 계엄군의 무력 진입이 확대·재생산돼 5월 광주처럼 대한민국 전역이 피바다가 됐을 것”이라며 “계엄이 시행됐다면 납치, 고문, 살해가 일상인 ‘코리아 킬링필드’가 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징계 절차 종결을 선언한 데 대해 “여당이 ‘코리아 킬링필드’를 기획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1호 당원 윤석열을 옹호한다”면서 “국민을 존중하기는커녕 국민 학살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 세금을 지원받고 국민 주권을 대신하는 국민 정당이라 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민주 “김건희 치명상 막으려 계엄… 명 특검 27일 처리”

박찬대 “노상원 수첩에 ‘3선 집권’  
“영구집권 구상한 것으로 봐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전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명태군 특검법’을 오는 27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는 3월 초 전후에 재표결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상원 수첩과 12·3 비상계엄 김건희 여사 개입 정황, 명태군 특검법이 모두 하나로 연결돼 있다”며 “명태군 특검은 비상계엄 동기를 밝히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문제인 전 대통령,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의 이름과 함께 ‘사살’ 등의 문구가 담긴 것을 두고는 “계엄은 경교용이 아니라 하는 게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첩에는 ‘전국민 출국 금지’, ‘3선 집권 구상방안’, ‘후계자는?’ 등 메모가 있다”며 “비상계엄 성공 시 헌법과 법을 개정해 3선 집권과 영구집권을

구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계엄 전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두 차례 문자를 보낸 것을 두고 “민간인 김건희가 광범위하게 국정에 개입했다는 사실과 김건희가 12·3 비상계엄의 준비와 실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비상계엄이 명태군이 황금폰 공개를 밝힌 다음 날인 12월 3일 전격 선포됐다는 점에 비춰볼 때 김건희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 증거”라며 “윤석열은 명태군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의 ‘명태군 게이트’ 긴급 현안질의를 명 씨가 수감 중인 창원구치소에서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장 방문은 논의하는 단계”라며 “(명 씨의 국회 출석) 여의치 않다면 현장 방문하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명씨를 당 차원에서 공익 제보자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 與, 21일 ‘국민 안전 점검’ 당정협의회 개최

국민의힘이 오는 21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부산 반안트리 호텔 공사장 화재 등 잇단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이어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잇따른 선박 전복 사고, 부산 반안트리 화재에 이르기까지 인명을 앗아가는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행의 대행 체제에 행안부 장관까지 공석이다 보니 어려움은 많지만, 당정은 국민들의 불안을 덜 수 있도록 ‘국민 안전 점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여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안전 대책 마련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 여야정 대표, 20일 첫 국정협의회 연다

추경·반도체법·연금 이견 팽팽  
민생 회복 진정성 시험대 주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0일 국정협의회 4차 회담을 연다.

지난달 9일 국정협의회 대표 4인 체제 구성에 합의한 지 42일 만에 대표 회담이 열리게 됐다.

장기간 대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반도체특별법 등의 현안을 두고 여·야·정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제안했다.

전체 규모의 3분의 1가량인 약 13조원을 들여 국민 1인당 25만원을 소비 쿠폰으로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에 추가 1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사업

이 핵심으로 꼽힌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예산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추경안이 미래 세대에 빚 부담을 과도하게 떠넘기는 데다, 정부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이 대표가 지역화폐 추경 편성을 포기하겠다고 하고서는 동일한 내용의 예산을 추경안에 넣으며 “현금 살포 포폴리즘”을 버리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근로 시간 문제를 포함한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주요 경쟁국이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인력의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근로 시간을 규제한다면 경쟁

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근로 시간 예외 조항은 뺀 채 여야 이견이 없는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 위주로 특별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장시간 노동에 의존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금개혁을 두고선 여당은 여야 동수의 국회 특위를 구성해 소득대체율을 포함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담당 상임위원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한 뒤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면서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야·정 대표가 여러 현안을 놓고 ‘툭다운’ 방식으로 머리를 맞대는 만큼, 이번 회담은 여야의 민생 정치 진정성을 평가해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김선욱 기자

## 민주 교육위 “하늘이법 당론 추진”

교원단체·학부모와 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이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하늘이법’ 당론 추진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듣는 교원단체·학부모 간담회를 연다.

민주당은 내달 법안 처리를 목표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백승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교육위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별이 된 고(故) 김하늘 학생을 잊지 않고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최근 교육부가 질한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등 이번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내놓은 대책들을 두고 “교육 현장과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지혜로운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제도가 치료 기피나 악성 민원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며 “학교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 모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하늘이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와 교사들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낙인을 찍어 질병을 죄로 여기지 않도록 대책과 입법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전체 교사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혐오가 확대되고 잠재적 위험인자나 범죄자로 간주돼 학교에 대한 신뢰회복과 학교 안전보다는 학교에 대한 불신과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원인이 교육당국의 위험 교사 방지와 늘봄학교 졸속 추진에 따른 인력·예산 부족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17일 교원단체 간담회, 18일 교육부 등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19일 학부모 간담회를 연달아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학교 안전대책과 하늘이법을 신중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 “2월말 3월초로 생각하고 있다”며 “특정하기 어렵지만 신속하게 하되 신중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